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윤곽 드러나

- 기본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



충청남도과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주식회사 프록스는 6월 8일 꽃박람회 개최될 안면도 꽃지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꽃과 바다의 향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및 휴양림 일원 약 793천㎡(24만평)에서 2009년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27

일간 박람회 개최가 바람직하며 100만명이상 관람객이 방문하고 사업비는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용역업체는 보고를 통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안면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면서 쾌적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 위주의 회장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제전시관을 비롯한 3개의 기획전시관과 2개의 산업전시관, 11개의 주제정원, 3개소의 공연시설을 제안하면서 다른 박람회에서 느끼지 못할 감동과 환희를 보여 주도록 독특한 전시연출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 앞서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은 분야별 전문가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2009꽃박람회는 2002년 꽃박람회의 시각과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통해 안면도에서만 느낄 수 있고 꽃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올 상반기중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추진기구 설립과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박람회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박람회장 예정지를 둘러본 자문위원들은 울창한 안면송이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2002년 꽃박람회에 버금가는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통대책 수립과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의 물론, 국제수준의 전시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02년도에 24일간 개최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32개국 178개 업체 참여와 4,617천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164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잠자고 있던 천혜의 수려한 경관의 안면도를 국제적 휴양관광지로 각인시키면서 서해안의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2007 충남·경기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참석, 통상지원 업무협력 모색 —

충청남도는 6월 4일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충남·경기 양 道의 통상지원 업무협력 및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道 수출유관기관 관계자 및 통상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상생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005. 1. 27일 '충남·경기 상생 발전협약'에 따라 매년 순회 개최하며 양 道의 수출 지원기관과 통상담당 업무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협력강화와 시책 소개 및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능력 함양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각 지역의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한 수출확대 및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특강과 양 道 공무원의 통상 지원 분야 연구 과제 및 발전시책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는 '맞춤형 토털마케팅'이란 주제 발표를 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의 국제교역 및 투자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양 道간 공동협력 방안을 이끌어 세계시장에 한발 앞서가는 통상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장을 가졌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능동적 경제 공무원의 행동철학의 정립과 함께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급변하는 수출 및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통상업무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國品制世’ : 충남 인삼산업, 한국에서 세계 중심으로!

— 5. 28(월), 충남 인삼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



충청남도도는 5. 28(월) 오후 2시부터 금산다락원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800여명의 인삼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충남인삼산업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삼산업의 중심지인 충남도가 최근 저가 외국삼의 공세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삼종주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인삼산업의

수호와 재도약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관한 인삼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림부 관계관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인삼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이어 충남도에서 충남 인삼산업, 한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를 슬로건으로 한 ‘충남인삼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인삼산업 관계자들과 이완구 지사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충남인삼산업종합발전계획’은 오는 2011년까지 5년동안 모두 3,0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가공·유통시스템 혁신, 외국삼 공세에 강력 대응,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인삼을 주제로 하는 건강도시 육성, 지역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에 걸쳐 5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인삼의 국제적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국제인삼표준센터 및 세계인삼정보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국제인삼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하여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계약재배 면적 비율을 22%에서 90% 수준으로 제고 시키며,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단보당 수확량을 현재 598kg에서 700kg으로 끌어 올리며 우수상품 생산을 위하여 26개 전 수출기업에 대한 GMP(우수식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시설사업 추진과 인삼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하여 모두 50개의 신상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다양한 체험·음식·쇼핑 등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인삼관광객을 7,500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증가시키게 된다.

신규소비를 대량 창출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 등의 참여를 통하여 국제인삼교역전 성과를 2,200만불에서 5,000만불로 늘리고 국가별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수출액을 60백만불에서 150백만불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간 거래액 6,700억원으로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전문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금산에 인삼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여 인삼의 본고장 금산을 국제적 건강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과 도, 시·군, 민간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인데 우선 폭넓은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의 원활한 지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언론사 및 학술재단 등과 공동으로 인삼산업발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충남인삼산업발전에 관한 의지를 밝히고 세계화 촉진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요한 사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충남도,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개막!

- 18일부터 사흘간 논산시 공설운동장등 21개 보조경기장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등 15,000여명 참석 -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생활체육협
의회는 ‘참여해요 생활체육, 함께
해요 희망충남’,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의 구
호아래,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도
내 생활체육동호인과 주민, 이완구
도지사, 유관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 1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도민생활체육·문
화축제’가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축제는 생활체육 동호인 간 유대감 조성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가족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심어주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는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6개 정식종목과 씨름 등 5개 전통종목 등 총 21개 종목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게 된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는 치사를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지역단위 생활체육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 충남도간 업무협약 체결

－ 백제문화의 발굴 · 정비 · 복원 및 문화유적의 세계화 노력 －



충청남도지사(이완구)는 5월 10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문화재청장(유홍준)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와 청간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장과의 ‘문화재 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충남도가 문화재청과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화재행정에 대한 도와 문화재청간의 교감을 갖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충남도는 문화유산 보존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재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화재청은 백제 고도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많은 역사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원형의 보존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에 많은 무게감을 실어 지원하며, 공주·부여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육성하여 쾌적하고 활기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의 개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문화재 정책 수립·집행에 노력하며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발굴·정비·복원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적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는 지방문화재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에 노력하고, 문화재청은 이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등 민간협력 저변을 확대·강화 ▲각종 재난 시 효율적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프로세스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쌍방 소통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에서는 향후 백제문화유적 및 내포문화권의 사업추진과 유교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현안 사업의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5. 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지방문화재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강원권 문화재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문화재 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 및 상생적 파트너 관계 설정을 통한 문화재 발전방안 모색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재 행정 관심도 제고 및 실무담당자 사기진작책 마련을 위해서 4개 권역(충청·강원권, 수도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충남도,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 선언!

- 충남 수질 II등급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정책목표와 42개과제 선정추진 -



충남도는 부처별 물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물·복지환경국·건설교통국 등 3국 7과에서 관리하던 물 관리를 총괄 하는 ‘물 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수질선진을 이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 통합관리 선언식’을 5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소준섭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문규 도의회 의장, 김용억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1부 ‘물 통합관리 워크숍’,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으로 진행됐으며, 제1부 워크숍에서는 물 관리전문가, 유관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이 본부장으로 ‘물 통합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제2부 ‘물 통합관리 선언식’ 행사에서는 물 통합관리 민관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한국과 학기술원 신항식 교수를 비롯한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하여 이완구 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은 “그 동안 3국 7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추진하던 물 관리 업무를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를 발족하면서 물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 본부에서 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실장은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가 빠른 시일내 명실상부한 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련 예산의 조정권한, 의사결정권한, 심사위원회의 귀속 등이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권한이 본부로 이관된 후 별도의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의 나아가야 할 방향’ 이란 주제로 충청남도 수질총량센터 이상진 센터장, 한국수자원공사 임성호 수도계획팀장, 한국농촌공사 충남본부 박성철 유지관리팀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성낙선 하천계획과장, 삼교호 수계네트워크 김병빈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이 있었다.

도는 충남 수질 Ⅱ등급 목표달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지속 확충·정비하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농업용 저수지, 담수호 등 호소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등 4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李 지사는 인사말에서 “전국최초로 시도되는 물 통합관리본부를 정점으로 관련 부서간의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내의 모든 하천가 호소 등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우리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 물 절약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물 통합관리본부에서 도내 모든 하천과 저수지, 상·하수도 등 물 관리업무를 통합·조정하여 도내 수질목표인 2등급 달성을 조기에 이루어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국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수질오염 예방과 절수운동을 생활화하여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봉주선수 ‘충청남도 홍보대사’ 위촉

— 충청인의 은근과 끈기 표상, 문화·관광·체육 홍보대사에 —



충청남도는 4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김문규 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토너 이봉주선수를 충청남도 문화·관광·체육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이봉주 선수는 충남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행사 및 도정에 대한 홍보

등 민간대사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펼쳐 나간다.

도는 이봉주 선수가 제105회 보스톤마라톤대회와 2007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 국민의 인지도가 높고 충청인의 은근과 끈기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도의 문화·관광·체육홍보의 책임자로 판단하여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지사는 인사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이봉주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더 큰 노력과 훈련을 통해 한국마라톤의 위상을 지켜 나가달라”고 당부하며 “충남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대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에는 이봉주선수의 가족과 도청마라톤 동호회인 마사도모 회원 등이 참석,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충청남도과 경상북도 MOU체결

- 이완구 충청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협력」 다짐 -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공조체제 구축 -



□ 백제의 본산지 충청도와 신라의 근원지인 경북도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 4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는 이완구 충청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문규 충청도의회 의장과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 등 兩道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 이번 MOU 체결은 충청도와 경북도 모두가 현안과제로 삼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

- 兩道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사업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 발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

□ MOU체결 내용을 보면 兩道가 공동 체제를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금년도 내에 제정한다는 것이 특징

- 이 법안은 도청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의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초래되는 도민들의 불편과 도청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의 직접적인 문제 외에도

- ① 참여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 ② 또한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와 「전북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 제정이 필요

□ 이에따라 제정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 ①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추진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기간 단축을 이루도록 하였고,
- ② 특히, 2005.1.1일 “증액교부세 폐지”로 정부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전남도와 전북도의 도청이전 사업비를 지원했던 국비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 ③ 입주시설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시설비 지원·융자, 그리고 종사자 이사비용 지원과 주택마련에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

□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분권·분산」과도 일치하는 만큼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 충청도와 경북도 출신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공동발의에 임한다면 법안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

□ 한편, 충청도와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 兩道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발의토록 할 계획이며
-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취임식 가져

- 연구원 혁신을 위한 도전과 변화 시도할 터 -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7월 9일 오전 연구원 회의실에서 제6대 원장으로 재임명된 김용웅 원장의 취임식을 송두범 연구실장, 신창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업무가 많아 지치고 힘들어 할만도 한데 오히려 과제가 많아진 건 연구원

을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되묻는 연구원들의 모습에 고마울 따름이다. 아무쪼록 제6대 원장의 소임을 맞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지만, 연구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충남의 미래와 발전이 곧 연구원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저 역시 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에 맞는 연구조직과 수행모델을 개발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연임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7월 6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의결된 現.김용웅 원장을 제6대 원장으로 재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김용웅 원장은 지난 3년간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의 경영혁신과 충남의 중요 숙원사업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대 원장으로 연임되었다.

특히 ▲전국 시도연구원 중 최초로 성과관리제(BSC) 및 임금피크제 도입 ▲부서장 순환 발령 ▲주요 8개 분야 연구T/F팀 구성 ▲적극적인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등 대폭적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았고, 평소 능력위주의 인사발탁을 선호하는 이완구 지사의 결단으로 산하 기관장 중 유일하게 연임하게 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완구 지사는 “현재 충남이 당면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충발연을 도정과 지역발전의 핵심 싱크탱크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도에서도 양질의 도정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용웅 원장은 “도청 이전, 행정도시 건설, 장항산단조성, 정부기관 지방 이전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충남의 이해를 대변하고 충남지역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인 김용웅 원장은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토연구원 연구실장과 부원장, 안양대학교 교수 등 경영능력과 연구수행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2004년 7월부터 충청연 제5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과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2주년 기념식 열어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4일 오후4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원 12주년을 맞아 김용웅 원장, 송두범 연구실장, 신창수 사무처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김용웅 원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12주년을 여러 임직원과 함께 축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또한 “충청남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사업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치행정연구팀의 최병학 박사와 산업디자인팀의 이충훈 박사에게 10년 장기 근속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1995년 6월 15일 처음 개원한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레 당 호안’ 박사 초청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특강 열어



충남발전연구원은 6월 11일 오전10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연구원 회의실에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 대전발전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 당 호안’ 한국·베트남 환경협력연구소장을 모시고 『지방화시대, 국제 환경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제2회 특별 강연 행사를 열었다.

‘레 당 호안’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와 함께 20여년의 전쟁으로 인한 국토 황폐화 등으로 수질·대기·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해외선진국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방식) 등을 통해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도 1992년 정식 수교 이후 정부차원의 ODA방식을 통한 환경 분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환경산업 관련 기업과 함께 하수

처리장 건설,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및 수출 등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환경산업·기술 협력과 함께 베트남 각 지방의 핵심 결정권자와의 유대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환경산업 육성 및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충남의 환경산업 발전은 물론 세부적인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레 당 호안’ 박사 약력 (현. 한·베 환경협력연구소장)

1964~1965 김일성대학 수학

1980~1984 모스크바대학 철강금속 석·박사

1996~2002 베트남 공업부 산하 국립산업환경연구센터장

1990년 이후 ‘산업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와 학계가 바로잡아야

—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착공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2007.5.21)에 대한 큰 반발이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공주시·연기군의회의는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비롯한 국내의 권위있는 학술단체의 주관으로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합동토론회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지자체 의회 모두 세종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충남발전연구원 등 국내 자치행정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가 참가, 정부의 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이처럼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는 이례적인 일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최초

건설 취지 및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만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비교를 통해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때를 맞춰 자치단체가 출범하여야 행정공백의 최소화,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의 편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경수 성결대 교수(한국도시행정학회장)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에 대하여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지향이념과 합치된 일관성있는 결정 ▲도시건설목적과 도시성격에 부합 ▲국내 도시체계상의 도시규모에 적합하게 결정 ▲과천청사나 대전청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그에 준거하여 부여 ▲지역내의 행정수요, 즉 주민의 기대편의 및 행정서비스, 행정효율성 등과 관련되어 결정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주민간에 상생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정부의 국가관리 이상이 행정도시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자 했던 분권, 즉 지방자치의 높은 가치를 현실 속에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애초에 계획했던 2011년 하반기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창조도시란 분권형, 주민참여형의 도시를 지향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접근방식은 도시의 창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도시 관할구역을 창조도시라는 관점으로 볼 때, 도시의 자족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도시발전 형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기능을 상호·보완함

으로서 도시의 창조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행정도시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형태로의 행정구역 확대를 포함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결국 현재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주시와 청원군의 주변지역은 배제하고 연기군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소진광 경원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입법은 적절한 절차와 적절한 시기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예고된 (가칭)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 입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법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예고된 법률안은 첫마을 입주, 지방동시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인데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되도록 추진되는 것은 명분과 실익이 없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에서의 주민행정서비스는 현행대로 연기군과 충청남도에서 맡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인구규모와 주변지역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하여야 하고 인구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광역시로의 승격요건을 충족할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역과 명칭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기능과 도시관리방식을 별개로 본다면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 포함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주시 일부지역과 청원군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명칭·시행시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가칭)세종특별자치시의 무리한 입법화 추진에 제동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는 도민, 각계 사회단체와 함께 어떠한 일이라도 온힘을 모아 세종시 설치 당초 취지에 맞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각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19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입법 추진에 있어 정치권으로의 확산과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충남은 문제없나?

—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아산시(시장 강희복)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공동으로 5월 30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강희복 아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중재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사무관,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등 지역개발 전문가

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자인 이중재(행정자치부) 사무관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과 규제완화, 고용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상규(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경기도의 경우 공여구역의 90%가 입지해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지만 충남의 경우 미군공여구역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을 것이

라면서 오히려 평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국제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충익(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아산시 둔포면은 평택으로 이전되는 미군기지에 불과 6k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평택국제화지구, 아산테크노밸리 건설 등 인근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한 적극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해당 주민의 민원, 환경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은 강희복 아산시장,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정동섭 호서대 교수, 이상호 한밭대 교수, 이희원 선문대 교수 등의 토론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이 아산시에 미칠 영향,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기본구상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아산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된 아산시 둔포면과 천안시 6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올 8월까지 최종 수립되면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민참여 확대로 공공갈등 해소를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주관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의 제1차 정기총회와 워크숍이 5월 23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행정자치부 관계자, 갈등관리전문가, 시·도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봉사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충남 지역의 현안 사업 중 중요 갈등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앙정부의 상생협력·갈등관리 기본정책 방향”,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해결 방안을 통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제거와 사회통합 기반 마련”, “지방정부 개발사업의 갈등완화 방안”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중제(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장은 “정부에서는 갈등 예방·해결 관리체계를 확립을 위한 국정의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이 곧 지방행정이라는 취지 아래 지방정부와의 상생·협력적 관계 강화,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갈등·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히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을 통한 갈등 조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공공갈등의 원인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부터 이어져오는 권위주의적 행정 관행과 경쟁우선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새만금 간척사업 등 전북 지역의 주요 갈등 사안을 대상으로 갈등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면서 주민 참여의 활성화, 사업 및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 갈등관리 전문가 육성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진하(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야산순환도로 개설 사업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가야산지킴이시민연대간의 갈등을 실례로 들어가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행정과 지역주민이 참여와 연대를 통한 생태공동체 문화의 창조와 계승에 힘쓸 때 환경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종합 토론을 통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충남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개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전문가 워크숍 열려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공동주관한 “좋은 아파트 만들기 전문가 워크숍”이 5월 16일 오후 2시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설계사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07년도 충청남도의 역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좋은 아파트의 개념과 실천방향”,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 관련 통합지침안”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호(한남대학교) 교수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자폐적인 단지가 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도시 커뮤니티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개방적인 단지구성, 기존 도시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조성, 유연한 주거동 배치, 일상적 생활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정(아주대학교) 교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단조롭고 획일적인 단지형태, 쾌적하지 못한 보행 및 외부 공간, 커뮤니티와 공공성의 부재, 부속시설 등 미관저해 요소의 노출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경관기준, 주민참여 유도장치, 지역차원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유도방안으로서 도시경관관련 세부 고려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디자인심의회 혹은 총괄건축가 MA 제도 도입 등 선진적인 운영시스템, 조화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한 관련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공익(충청남도 건설정책과) 팀장은 ‘제1·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등 통합 지침 등을 가지고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좋은 아파트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시행자·설계자 및 관계 공무원 모두가 좋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충남도 및 16개 시군의 도시계획 및 건축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설계사들이 함께 종합 토론을 마련하는 등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의지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場이 되었다.

충청남도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상생 위한 경제통합 추진위틀”

- 3개시도 공동기구 필요성 확인... 핵심 과제엔 이견 -
- 2차 공동발전 워크숍 -

충청권 3개 시도 공조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경제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청권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시·도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핵심기구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5월 16일 3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4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대전, 충남·북 3개 시·도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권 공동발전 실무워크숍을 갖고, 실질적 공조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3개 시·도별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 지난 2일 1차 워크숍에서 논의된 충청권 발전특별법 초안을 보완하고 오는 6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업경제분야 발표를 맡은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상생전략으로 충청권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청주·청원간 생산연계벨트 및 대덕~행정도시~주변지역간 첨단산업벨트 구축, 500만평 규모의 국제비즈니스 및 의료 스마트타운 조성, 인력·정보·기술 연계시스템 구축, 창업기반 확충 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분야의 경우,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박사는 광역 물류거점시설(대전 유성) 및 대전~행정도시~청주간 연계 도시철도 구축, 논산~서대전~신탄진~조치원~오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마련, 연기군 남면 일대에 호남고속철도 간이역 설치 등을 강조했다.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도시 국제화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 확장과 국제노선 확대, 거점 항공사 육성, 동서횡단 5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대전~세종시~청주공항간 경전철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연구원에서 제출된 상생협력 방안과 연계, 이를 추진할 행정기관간 실질적 협력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에, 대전시는 경제협업체 구성에, 충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및 행정도시 개발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는 등 시도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의 실질적 공조를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논의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팔 걷어 부치다

- 2007년도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세미나 개최 -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김용웅, 現.충남발전연구원장)는 5월 3일 목원대학교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그리고 전국 시도연구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도연구원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위상 정립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종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소속 연구원간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모성은(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와 구본근(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장 등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산·학 협력을 비롯한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정책 등을 통해 지역연구원이 지역경제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광희(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는 “정부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연구 인력 증원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사무국-충남발전연구원)는 전국시도연구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권 발전특별법' 초안 나왔다

— 공공시설 우선 투자 등 정부지원책 담아 —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은 5월 1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워크숍'을 열고 특별법 초안을 제시했다.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특별법 초안은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계와 낙후지역 광역 개발을 통해 충청권이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충청권 발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충청권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중점개발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은 이를 국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규제 특례 준용, 공공시설 투자 우선 지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5월 2일자 임도혁 기자〉

‘강한 백제’ 재조명 문화산업 창출해야

— 충남도 역사문화원 ‘백제문화 대토론회’ —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선 백제 고도의 공간구조 설정을 통한 육성, 문화유적의 고부가가치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긴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4월 26일 충남도 역사문화원 주최로 공주 공무원교육원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된 ‘백제문화 대토론회’는 백제문화 세계화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한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 발표 내용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백제문화제의 공주·부여 통합 개최를 통한 세계화, 2010년 ‘대백제전’ 개최, 백제의 문화산업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 세계화 사업의 성공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 백제 고도의 공간 구조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라(채미옥 국토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백제문화권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선 고도의 공간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 고도의 지형적 조건인 산과 하천, 궁궐, 성곽, 사찰, 가로망 등의 고도의 핵심거점을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고 핵심거점 주변의 농경지와 시가지를 역사환경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고도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선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고도축 조성, 국제공모를 통한 고도의 전통문화 홍보 및 세계화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한 전통 숙박지 및 상업지 조성도 요구된다.

▲ 우수한 문화유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라(이남석 공주대 교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는 30여년전의 골격과 변함이 없고 매장문화재 중심의 기초조사도 매우 부실하다. ‘문화유적 분포지도’에서 소홀한 유물 산포지 등 매장문화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지상 문화재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망라해 수록해야 한다.

백제문화유적을 역사적 테마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조사, 정비의 전문성 강화, 발굴조사의 경쟁적 환경 조성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적용 등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 ‘강한 백제’의 유산을 재조명, 문화산업을 창출하라(정경훈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백제의 여전사 ‘소서노’부터 황산벌 전투의 남전사 ‘계백’까지 강한 충남의 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연계해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음반, 모바일 등의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마을의 조성과 백제문화제, 뮤지컬, 인형극, 콘서트, 컨벤션 기능을 수용하는 축제마을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영화마을과 휴양 기능을 겸한 예술인 마을, 청소년 체험시설, 먹거리와 쇼핑 등의 상업·유통 시설, 리조트와 펜션타운 등의 숙박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문화산업화의 연구 기능을 담당할 백제문화연구소 등의 조성도 요구된다.

▲ 백제문화제를 한국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육성하라(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팀장)

백제문화제는 백제역사를 소재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충남 및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로 확대, 개최돼야 한다.

관 주도의 행사를 탈피해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관련 단체, 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축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중·일 고대문화를 테마로 하는 축제화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경주문화엑스포 및 서울, 익산의 백제문화와 차별성을 갖는 테마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백제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획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전일보 4월 27일자 5면, 이용 기자〉

충청권 공동발전 손잡았다

- 3개 시·도 전략세미나 -



대전·충청 경제권 통합과 공동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 세미나’가 4월 19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대전·충청권 3개 시도광역단체장간 합의된 ‘충청권 공동발전 5개안’에 기초해 구성된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주최로 3개 시·도 통합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청권의 경제통합을 통한 공동발전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충청권 공동발전 기본구상 및 특별법 제정방안, 대구·경북지역 통합경제권 사례,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통합경제권 발전방안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안 모색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소진광 경원대학교 교수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해당지역 모두가 역할을 분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박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광역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전일보 4월 20일자 8면, 황해동 기자〉

“살고싶은 금산 건설 주민 삶의 질 높여야”

- 「금산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인구감소 해결방안 등 금산군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 등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4월 9일 금산 다락원 소강당에서 공무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산업 특화발전 전략’, ‘인구유출 방지 및 도시민 유치방안’ 등 주제발표를 통해 금산군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금산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과 소득을 만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과 외지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벤처농업대학 전준일 교수는 “트렌드 적합 농산물을 생산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여야 한다”고 농업발전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과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개성 있는 문화 등 보유자원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작업인 동시에 현재 주민의 삶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금산군과 충남발전연구원과의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제 활성화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4월 10일자 17면, 송오용 기자〉

‘충청지역혁신 대장정 2007’ 개막

— 6월 27(수)부터 3일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충청권 혁신역량 결집 —



6월 27일부터 29일까지(3일간) 충청권 지역혁신협의회와 3개 시·도(대전·충남·충북)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충청지역혁신 대장정 2007’ 지역혁신박람회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막됐다.

한범덕 행자부 제2차관, 정진철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등 주요인사

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차체 분야, RIS 분야, 대학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5개 분야의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충청권 지역연구원 공동세미나 등 8개 분야의 컨퍼런스 ▲전시행사 ▲문화이벤트 행사 등이 펼쳐지며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발표 및 홍보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정보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막식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대독)는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발전을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며, 앞으로 대전충남북은 함께 손잡고 충청권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에도 주력하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시부스 구성은 지역혁신Zone, 연구지원 기관Zone, 지역특산물Zone, 대학·산학 협력 Zone, 중소벤처기업Zone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관람객에게 충분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충남도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등 도정목표 를 콘텐츠로 표현한 충남관에 선문대 RIS사업단이 연구개발한 안전 시스템 관련 제품과 진양대 RIS사업단의 전동스쿠터 등 혁신사례 전시품 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 지역홍보와 더불어 충남도의 변화된 위상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6월 22일 충남 T/P에서 개최한 지역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작으로 선발된 ▲ 웰빙 서산생강 한과 농촌 경제 효자가 되다!(서산시) ▲인삼약초 바이오 기업종합지원 체계 운영 (중부대) ▲백제문화원형 특화산업 인력양성사업단(공주대) 등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하여 혁신주체로써의 위상을 당당히 뽐냈다.

이번 충청권의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혁신박람회는 그동안 2004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대와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혁신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전국적인 지역혁신 분위기를 고취시키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산업혁신, 지역투자유치 홍보를 통한 실질적 지역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 신규위원 위촉 및 '07년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안)등 심의 가져 -



충남지역혁신협의회(의장 김용웅)는 4월 6일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위촉장 수여(7명) ▲충남도지사의 격려사 ▲협의회 의장의 인사말

씀 ▲2007 도정방향 설명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안 심의 ▲충남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실태와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등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이완구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혁신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리더가 되어 힘을 모아야 성공한다고 생각 한다”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에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혁신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심의 안건은 2007년도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안과 운영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7. 3.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지역 혁신발전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자치부의 총괄 지원·조정강화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차미숙 박사가 주제발표한 ‘충남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실태와 거버넌스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5명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남의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알찬 전체협의회로 기억되어졌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주체간 교류활성화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4. 2월에 출발, 5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혁신협의회 운영 및 도정현안 사업의 심의·평가 등 총25건을 수행하였다.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4월 20일(금요일) 충남발전연구원 5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16개 시·군 평생학습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워크

숍에서는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청 김상돈 평생학습 담당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대덕교육학술연구원 교육개발팀 박성우팀장이 바람직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충청남도는 도 내 16개 시·군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충청남도 수질총량관리센터 설립기념 워크숍”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금강수계 관련기관을 초청하여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설립사례와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센터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시·군에서의 원활한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4월 10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안’, 이상진 총량관리센터장의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낙동강수계센터 임정훈 전문위원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개선방향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수질관리 전담기구로써 수계별 환경조사·연구와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금강수계 4개 시·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금강의 수환경 관련 자료의 공유와 기술적 조정 또는 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현재 8개과 12개 담당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물 관련 업무를 물 통합관리 본부를 설치하여 총괄할 계획이며 총량관리센터가 수질관리의 정책적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